

최종보고서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
정책성등급조사 결과보고서

2023. 9.

< 요약 >

1. 행사 개요

□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 개최 계획

- 기간: 2024년 6월23일~6월25일(총 3일 간)
- 장소: 미정(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중 선정 예정)¹⁾
- 주관: 행정안전부(유엔 경제사회처(UN DESA) 공동 주최)
- 참가 규모: 유엔회원국 정부, 국제기구, 전문가 등 100여 개국 1,500여명
- 주요 행사: 유엔 공공행정포럼(개·폐회식, 전체회의, 분과별 워크숍), 유엔 공공행정상 시상식, 유엔 전자정부 평가 결과 발표, 기타 부대행사(정책현장 방문 및 문화 체험 등)

□ 개최목적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과를 점검하고 회원국의 과감한 정책과 행동 촉구
- 4개 분야 5개 지역에서 최고의 정책과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유엔공공행정상) 하고 우수사례를 공유·전파
 - * 4개 분야: ①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전달을 위한 혁신 ② SDGs 달성을 위한 공공조직 효과성 강화 ③ SDGs 달성을 위한 성인지적 공공서비스 장려 ④ (특별분야) 코로나19에 대한 제도적 회복력 및 혁신적인 대응
 - * 5개 지역: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서아시아, 유럽·북미, 중남미
- 193개 회원국 대상 유엔 전자정부 평가 결과 발표 및 디지털 전환 관련 우수 사례 공유·논의
- 유엔 회원국과 개도국의 행정혁신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디지털전환 및 공공 행정 역량 강화 지원으로 공동 발전에 기여

□ 기대효과

- 공공행정 혁신 및 디지털정부 선도 국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1) 개최계획서 상에는 동 국제행사 개최 장소로 인천, 부산, 제주도 중 한 곳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3곳 외에도 서울을 개최 후보지에 포함함.

-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 정부 성과 및 대한민국이 구축한 서비스와 기술의 행정 한류 확산으로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기회 확대
- 참가자(약 1천5백 명)의 직접적 소비지출(약 33.8억 원 추산)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 발생

□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의 주요 프로그램

- 포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제도의 혁신 관련 정책과 이행방안에 대한 고위급 패널토의 및 분과별 심층토론
- 유엔 공공행정상 시상식: 5개 지역별로 공공행정서비스의 혁신적 성과와 기여도를 평가하고 최고의 정책과 사례들을 선정하여 시상
- 유엔 전자정부 평가결과 발표: 2년 마다 회원국의 전자정부 발전과 온라인 참여 부문의 수준 평가
- 부대행사: 해외참가자의 우리나라 지자체 정책현장 방문, 문화 체험 등

□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의 주요 일정

프로그램	일시	내용
개회식	2024.6.23.	- 개최사: 행정안전부 장관, UN 경제사회처 사무차장, UN 사무총장 - 축 사: 대한민국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 기조연설: UN 회원국 중 정상급 인사 등(미정)
전체회의 (총 3회)	2024.6.23.~ 2024.6.25.	- 발제 및 고위급 패널토의, 청중 질의응답
워크숍 (총 6회)	2024.6.23.~ 2024.6.25.	- 한국 행정안전부 주관 워크숍 3회 ·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는 글로벌, 지역적 트렌드 · SDGs 이행 가속화를 향한 정부혁신 · SDGs와 지방정부 - 유엔 사무국 주관 워크숍 3회
유엔 공공행정상 시상식	2024.6.25.	- 유엔 공공행정상 시상식 및 특별상(개최 지자체) 시상식 · 유엔 경제사회처 사무차장 시상
정책현장 방문	2024.6.24.	- 정책현장 방문(개최 지자체)
폐회식	2024.6.25.	- 폐회사: 유엔 경제사회처 사무차장, 행정안전부 장관

2. 정책성 분석

가. 행사 개최의 공익성

㉠ 국익과 공익 기여

-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은 유엔 회원국들의 공공행정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혁신 촉진 등 범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행정 및 규제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촉진시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SDGs Goal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에 기여
 - 유엔 공공행정포럼의 본회의, 역량 개발 워크숍, 모범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정부·민간·시민사회 간의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SDGs Goal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를 도모
- 우리나라의 정부혁신, 디지털정부, 지방자치균형발전, 안전정책 및 재난관리 등 공공행정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유엔 공공행정포럼 개최를 계기로 거버넌스·공공행정 혁신 기조 강화, 정부의 역할 및 노력 재점검과 역량 제고, 아이디어·모범사례의 발굴·공유·확산 활성화 등을 기대
- 이와 함께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통해 관련 대내외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기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

- 행사목적의 국익·공익적 기여: 4개 행사목적에 대해 65.6~66.7% 긍정 답변
- 긍정적 효과의 범위: 국제적 36.9%, 개최지 35.5%, 전국 17.5%
- UN SDGs 인지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 37.8%, 들어본 적도 없다 28.8%

- 본 행사의 개최는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국정과제 11)’,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국정과제 13)’,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국정과제 99)’

〈관련 설문조사 결과〉

- 국정과제 추진 기여에 대해 다수가 긍정적 답변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63.1%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55.6%
 -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56.7%

- 전국민 설문조사 결과, 유엔 회원국 SDGs 달성 촉구, 유엔 공공행정상 정책 사례 공유 등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이 달성하고자 하는 4가지 주요 목표가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주요 목표별 기여도(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 : ▲유엔 회원국 SDGs 달성 촉구(65.6%) ▲ 유엔 공공행정상 정책사례 공유(66.8%) ▲전자정부 평가결과 등 공유(65.8%) ▲선도국가로 국제사회 디지털 전환·공공행정 기여(67.7%)

- 설문 응답자들은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이 공공행정 혁신 등에 기여하는 선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행정한류확산을 통한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주요 기대효과별 기여도(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 : ▲공공행정 선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72.1%) ▲행정한류확산을 통한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확대(69.8%) ▲참가자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58.7%)

② 개최목적 달성 가능성

- ‘유엔 공공행정포럼’은 2003년 UN 공공행정의 날(6.23) 지정 이래로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은 과거 개최된 포럼의 프로그램 구성과 거의 유사한바, 개최목적 달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개·폐회식, 기조연설, 전체 회의, 분과별 워크숍, 유엔 공공행정상 시상식, 유엔 전자정부평가 결과 발표, 부대행사 등의 프로그램 마련
- KIEP가 실시한 전국민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은 동 포럼의 프로그램이 개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

〈관련 설문조사 결과〉

- 프로그램별 행사 개최목적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전국민 인식(긍정 답변 비율)
 - 개·폐회식/기조연설/전체회의/분과별 워크숍 등 59.0%, 유엔 공공행정상 시상식 51.0%, 유엔 전자정부 평가결과 발표 61.4%, 부대행사 63.9%

③ 주무부처 정책과의 연계성

-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의 개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업무계획(2023 행정안전부 정책 방향 업무보고)과 밀접하게 연계
 - ‘유엔 공공행정포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효율적인 디지털 정부로의 이행 및 가속화와 행정서비스 혁신 등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업무계획에 포함된 5대 약속 중 하나인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실천 과제(① 정부혁신과 현안해결의 플랫폼 역할 강화, ②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③ 군살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정책)에 포함
 - 그 외에도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과 디지털정부 관련 제반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정부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방자치균형(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등)과 안전 및 재난관리 등의 개선을 추진
- ‘유엔 공공행정포럼’에서 이루어지는 유엔 전자정부평가는 행정안전부 소관 국정과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국정 과제 11)’ 등과 밀접하게 연계
 -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보급,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행정 업무 재설계 및 국정운영 과학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데이터의 안전 활용 기반 강화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 혁신을 이끌어 내면서 전자정부 수출 및 대개도국 ODA 확대를 도모

4] 주관기관 중장기정책과의 연계성

- 본 행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행정 혁신과 국제협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제반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
 - 정부는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채택된 ‘요하네스버그 공약’과 ‘이행계획’에 동참하여 2006년 우리의 우선 해결 과제를 담은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현재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을 시행 중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까지는 환경과 자원, 기후변화, 경제 측면을 중심으로 대응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부터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를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사회 투명성 제고가 추진되었고,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평화·정의·포용(SDGs Goal 16)과 글로벌 파트너십(SDGs Goal 17) 관련 목표가 각각 13개와 7개로 대폭 확대
- 유엔의 전자정부평가 목적(전자정부 수준 제고를 통해 공공행정서비스 질 개선 및 효율성·투명성 강화)은 우리의 「전자정부 기본계획」과 밀접하게 연계
 - 정부는 2016년 복지·재난·생활안전·환경 등 사회 전 분야의 현안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한다는 목적 하에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21년 지능형 서비스 혁신과 데이터 행정 강화, 디지털 기반 확충을 달성하기 위한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시행

나. 행사 계획의 우수성

1] 행사계획 실현 가능성

- 유엔과의 공동주최, 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역량과 동일 행사 개최 경험 등을 고려할 때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의 행사계획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
 - ‘유엔 공공행정포럼’은 2003년 이래로 매년 개최되어 온 연례 국제행사로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

- 주요 프로그램은 전체회의 및 토론, 분과별 워크숍, 공공행정 서비스 분야 시상식으로 매년 일관된 포맷을 유지
- 한국은 2014년에 동 포럼을 개최한 경험이 있으며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0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전까지 오프라인 형태의 행사 추진을 진행한바, 주관기관은 동 포럼의 개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고 판단
- 행사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가자 및 참가규모 변동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최장소가 확정되면 동 국제행사와 지자체 홍보 효과 및 이미지 제고를 연계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② 개최시점 적절성/필요성/중복성

- 이 행사는 2024년 6월 개최 예정이며, UN 공공제도 및 디지털정부국(DPIG)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 것이므로 개최시기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오프라인 행사라는 점에서 2024년 개최는 의미가 있음.
- KIEP 설문조사('23. 8.)에서도 2024년에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시기에라도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이 64.3%로 높은 비중을 차지
- 공공행정 및 정부혁신, 전자정부 평가 등과 관련한 정책성과 및 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UN 주최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동 행사 미개최 시 다른 기관이 이 행사를 대체하여 동종 유사행사를 개최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국제 행사와의 중복 문제도 없다고 판단
- 유사 주제를 다루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 서밋'의 경우 시민사회-회원국 정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주관 행사로 그 성격이 다르며, 2021년 서울 개최 이후 차기 행사는 2023년 9월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 예정으로 개최시기 중복 문제 또한 없다고 판단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유엔 공공행정포럼의 2024년 개최에 대해 전국민 응답자의 57.2%가 긍정 응답
- 2024년에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개최하지 못할 경우 '다른 시기에라도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이 64.3%로 높은 비중을 차지

③ 내외국인 유치 현실성

- 주관기관은 100여 개국에서 총 1,500명(외국인 700명, 내국인 800명)의 참석자를 계획하고 있음.
-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2014 유엔 공공행정포럼」의 참석자 수(1,570명)와 오프라인 형태의 포럼 개최에 대한 선호 가능성, 유엔과의 공동주최임을 고려할 때 내외국인 유치계획은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
 - 다만 고위급·저명 해외인사 섭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UN과의 협의는 물론 다양한 채널로 해외인사 섭외를 조기에 진행하고, 해외인사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부대행사로 계획할 필요

④ 홍보 적절성

- 홍보계획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동 국제행사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별/매체별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공공행정 혁신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 '국제사회 공공행정서비스 개선 및 정부혁신 역량강화 발전에 기여'라는 개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내적 홍보계획 외에 대외적 홍보계획 수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홍보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및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운영을 포함하여 다방면에서 유엔과 협의할 수 있을 것임.

⑤ 과거 주관기관 유사행사 경험 반영

- 공공행정포럼과 공공행정상 시상식은 매년, 전자정부평가 결과발표는 2년마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행사로서, 행정안전부는 201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 등 이전 행사의 추진사례에 기초하여 이 행사의 예산 및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
 - 이전의 행사개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이번 행사의 개최계획 수립 시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별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
- 향후 세부 운영계획은 UN측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최국이 담당하는 사항 혹은 자체 행사에서는 과거의 개최사례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적절
 - 이 행사의 주요 논의주제로 지속가능발전, 디지털 혁신 등이 제시되고 있는 바, 이전의 행사들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닐 것으로 판단
 - 주요 프로그램 구성도 이전 행사(2014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존 행사의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되, 기존 행사 진행 시 발생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절히 마련할 필요

⑥ 시설물 활용 계획 합리성

- 동 행사는 신규 시설물의 건축 없이 기존의 컨벤션센터 등의 시설을 대여할 계획으로 파악되는바, 시설물 사용계획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 2024년 6월 행사 개최 예정이라는 점에서 예산 확정과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서 신속히 개최지를 확정하고 행사장을 확보할 필요

다.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① 연계성 및 접근성

- 행정안전부는 공공행정과 전자정부의 주무부처로 '유엔 공공행정포럼'의 주관 기관으로 적절

- ① 행정안전부는 「2014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으며, 「2020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개최
- ② 행정안전부 소관의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2년 주기의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3위권 이내의 높은 순위를 기록
- ③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공동 주최하는 UN DPIDG는 ‘유엔거버넌스센터’의 상위 기관으로 한국 정부와 UN 간 기술협력 신탁기금 협정(조약 제2298호)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가 DPIDG에 매년 150만 달러의 기금 납부

〈관련 설문조사 결과〉

·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과 행정안전부 주관 간의 연관성을 묻는 전국민 설문조사 결과, 이상 3개 사유에 대해 응답자의 각각 56.4%, 62.8%, 57.0%가 긍정 응답

-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의 주요 방문객은 외국인(100여 개국, 700여 명)으로 국제공항 및 숙소로부터 행사 장소로의 접근성이 중요
 - 서울(코엑스)과 인천(송도컨벤시아)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있으며 공항리무진을 통해 쉽고 빠른 접근이 가능
 - 특히 코엑스는 코엑스 도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이 바로 연결
 - 부산(벡스코)과 서귀포(ICCJEJU)는 인근에 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이 있으나, 아시아 지역 도시 중심으로 취항하고 있어 유럽, 미주,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등으로부터 오는 방문객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이 필요
 - * 김해국제공항 취항국: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몽골, 괌, 사이판; 제주국제공항 취항국: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몽골
 - 후보지역 4곳 모두 행사장 3Km 이내에 참가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5성급/4성급 호텔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숙소로부터 행사장까지의 접근성이 우수

〈행사 후보지역 숙소 현황(3Km 이내)〉

	코엑스	송도컨벤시아	백스코	ICCJEJU
5성급 호텔	6	3	4	7
4성급 호텔	13	2	9	1

자료: Booking.com 참고

② 과거 유사행사 성과 및 인프라 확보

- 행정안전부는 동종 또는 유사행사인 2014년 UN공공행정포럼, 2021년 열린 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 서밋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평가
 - 201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은 사상 최대 규모인 133개국 약 1,570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목표(1,000명)을 초과 달성
 - 2021년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 서밋은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가장 많은 정상(13개국)과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하였고, 또한 시민사회 및 정부 관계자 참여도 최대치를 기록

③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의

- ‘유엔 공공행정포럼’은 중앙정부 주관 행사로 효과적 개최 준비를 위해서는 UN과 행정안전부 간 원활한 협력이 보다 중요
 - 다만 개최계획상 ‘정책현장 방문’ 및 ‘특별상 시상식’ 등은 개최 지자체가 담당하며, 행안부 주관 워크숍 중 ‘SDGs와 지방정부’와 관련해서도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개최도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개최계획서 상에서도 중앙부처-지자체 간 세부 협의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
 - 개최도시를 신속히 확정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프로그램의 추진방안과 이와 관련한 중앙부처와의 협력사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
- * 「2014 유엔 공공행정포럼」의 경우 2013년 10월 21일 행사장소 확정 이후 포럼 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지자체 등과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

④ 지역주민/기업과의 협의

- '유엔 공공행정포럼'은 행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 혹은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
 - 다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워크숍 개최 등은 관련 주제의 학회 및 단체 등 민간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현재 계획서상 민간과의 협의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
 - 향후 공공행정, 전자정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등 민간 부문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포럼 의제 선정, 전문가 그룹의 역할 등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할 필요
- * 「2014 유엔 공공행정포럼」에서도 주요 의제 및 행사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주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14.1.~'14.9.)

⑤ 지역주민의 지지

- KIEP가 실시한 전국민 설문조사('23. 8.) 결과,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의 국내 개최에 대한 지지도는 6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의 국내 개최 지지도
 - 지지한다(적극 지지한다+대체로 지지한다): 63.6%
 - 지지하지 않는다(별로 지지하지 않는다+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9.6%

라.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① 국고지원 불가피성 사유

-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의 공익성과 파급효과, 행사의 국제적 권위 등을 고려할 때 행사 개최를 위한 국고지원 요구 사유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주관기관은 이 행사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공공행정혁신, 행정한류의 확산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 KIEP가 실시한 전국민 설문조사('23. 8.)에서도 응답자의 72.0%가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② 국고지원 수준 적절성

- 중앙정부 부처가 주관한 유사 성격의 국제회의와 비교할 때, 이 행사 개최를 위한 국고지원 요청 규모(30억 원)는 과도한 수준은 아니나, 과거 동일행사 보다는 높은 수준
-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 행정안전부와 OGP 사무국 공동주관, 개최일 수 3일, 예상 참석자 수 2,500명 계획, 26억 원 국고지원 요청
- 「2013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외교부 주관, 개최일 수 2일, 예상 참석자 수 1,200명 계획, 30억 원 국고지원 요청
-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외교부와 국방부 주관, 개최일 수 2일, 예상 참석자 수 1,300명, 30억 원 국고지원 요청
- 「2014 유엔 공공행정포럼」과 「2020 유엔 공공행정포럼」 준비 단계의 편성 사업비는 각각 15억 원과 18.5억 원

3. 사업비 분석

□ (공공행정포럼 준비기획단 운영경비) 총 7억 원 중 약 4,471만 원 과다계상된 것으로 평가

- 행사장 임차료는 전체회의장을 제외한 임차료가 과대하게 계획
 - 개최지가 결정된 후 협의를 통한 임차료의 적정 금액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준비기획단 사무집기, 임차비, 기타운영비, 홍보비 등은 다소 과대하게 산정

□ (공공행정포럼 개최 행사대행 경비) 총 23억 원 중 약 2.9억 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평가

- PCO 전문인력 인건비는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일반인력 및 행사관련 인력에 대한 인건비, 오·만찬 식대비용 등은 과다 산정²⁾

〈사업비 적정성 분석 결과〉

(단위: 원)

항목	계획금액(A)	검토금액(B)	증감(B-A)	검토율(B/A)
공공행정포럼 준비기획단 운영경비	700,000,000	655,285,144	-44,714,856	93.61%
공공행정포럼 개최 행사대행 경비	2,300,000,000	2,007,315,680	-292,684,320	87.27%
총사업비	3,000,000,000	2,662,600,824	-337,399,176	88.75%

2) 국내참석자(연사)로 부교수 이상을 초청하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숙박비는 실비 지급되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여비 항목의 검토예산은 증액될 여지가 있음.

4. 결론

- 본 행사의 정책성은 준수한 수준이며 행사개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있는 것으로 평가
 -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전문가 8인에 의한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의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점은 91.4점(100점 만점)으로 도출

〈AHP 평가자 8인의 평가 결과〉

평가기준	배점	평점	종합평점
행사개최의 공익성	30	93.1	91.4
행사계획의 우수성	30	90.3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20	91.4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20	90.7	

주: 배점은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명시된 가중치로 종합평점은 배점을 기준으로 항목별 평점의 가중평균으로 도출

- 본 행사의 성과 제고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제안
 -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1,500석 이상의 회의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개최지역 및 시설을 선정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필요 시설의 임차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외국인 참가자의 원활한 행사장 접근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제공 방안 마련
 - 개최장소가 부산 또는 제주도로 선정될 경우 공항내 환승정보 제공 및 안내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
 - 이전 행사(2014년 및 2020년) 개최 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최 계획에 적절히 반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본 행사와 연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국내 민간기업들의 홍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민간기업의 참여 계획(전시행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기업들의 홍보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예를 들어, 온라인 홍보관 마련 등) 마련
- * 「2014 유엔 공공행정포럼」의 경우 전시행사를 통해 정부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